

#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5월 25일 발행 (월간 · 비매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 · 편집인 이정환(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 · 김재극/(주)문우사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소득안정제도 마련되어야”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 토론회 5월 20일 개최



토론회에서 박동규 연구위원은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 20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 도입 제안

이날 토론회는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이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농가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감축대상보조(AMS)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제도로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같은 이전

수입을 합친 수준을 말한다.

### 소득안정 목표수준 2가지로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박 연구위원은 쌀농가 소득안정 목표수준을 기준연도 가격에서 일정비율 감축한 수준을 목표가격으로 하여 당년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수준과 최근 5개년 가격 중 최

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과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가 도입되면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제시되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쌀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광파 소시모 상임이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박영배 한국경제 논설위원, 사공용 서강대 교수,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오덕화 농민신문 편집국장, 윤주이 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이수화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홍성필 농협 양곡부장, 홍종근 전농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준연도의 설정과 이행연도의 설정 및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KREI,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우리 연구원이 경제사회연구회의 2003년 평가결과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송미령 부연구위원 등이 연구한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5월 25일 경제사회연구회에서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연구원은 연구와 경영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쌓아 타 연구기관에 모범이 되어 이번에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특히 농업·

농촌 여건변화에 부응한 중장기 비전제시 등 정책연구 강화와 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및 농업·농촌분야 지식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관리운영시스템 개선, 활기찬 직장문화의 조성, 업무환경 개선 등을 이룬 것이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우리 연구원은 연내에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초일류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기일층 분발할 각오이다.

# 농지제도 소유규제 완화, 계획적 전용 중심뒤야 농지제도방향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져



농지제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통해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4월 28일 새국토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의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1백여명이 참석해 농지제도의 방향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농지제도, 농지전용규제 강화

우리 연구원 박석두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1970년 임차농가 비율은 30%에서 2002년에 71.7%로 급증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붕괴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의 계획적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제조건으로서 영농규모화사업의 확대와 농지은행제도의 도입, 농지관리기구의 설립,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의 확립,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란 제목의 발표에서 "도시용지 수급불균형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문제임으로 전국적인 농지 규제 개혁보다 입지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이를 인정하는 농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 농지 소규모 난개발이 더 큰 문제

또한 우리 연구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은 '농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전용은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용량보다 필지단위 농지전용에 대한 소규모 난개발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농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양적규제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NGO 입장에서 본 농지제도의 개편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의 계획적 이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용이익을 얻는 자와 규제손실을 입는 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제대상 농지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부담금 수입을 영농규모화사업 또는 우량농지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농지제도 개선 의견 다양하게 제시

이어 전북대 박정근 교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농지전용규제가 불필요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지

전용은 국민전체 이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지보전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남북통일 대비, 다원적 기능 등을 위해 농지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정부의 농지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농지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농지은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완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농지를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황연수 동아대 교수는 "농정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농지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농지제도가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한철 한경대 교수는 "농지제도와 농촌활성화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하며 우량농지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계획센터대표는 "소유규제는 풀고 전용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구병리 주민에게 감사패 받아

우리 연구원이 마을 개발계획을 세워 마을개발을 마친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구병리 마을 주민들이 연구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보은군 구병리 마을개발계획은 2002년도에 우리 연구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마을개발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난 5월 15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구병리는 이번 마을 개발로 주민공동체의 조직체계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최근 5가구가 전입하는 등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다.

<b>알림</b>	2004년 연우회 정기총회 및 연구원 직원과의 만남을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연구원 별관 청사를 보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연우회원들을 초청,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 6. 18(금) 16:00
	□ 장 소 : 연구원 대회의실

# 쌀협상, MMA 증량폭과 관리방식이 쟁점

## 농특위와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농업·농어·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5월 17일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정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소비자·전문가·정부의 열린 토론을 통해 쌀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쌀 협상 쟁점, 전망 및 대책'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 최소시장접근 물량(MMA) 증량폭, MMA의 관리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해당사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해당사국의 쌀 산업 현황자료를 소개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가 '쌀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관세화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분법적인 입장은 우리의 협상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의 쌀 시장협상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정영일 교수 사회로 열려 문경식 전농총연맹 회장, 온기운 대일경제 논설위원, 이수화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이종수 농협 조사연구소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이흥세 한농연 정책 부회장,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장,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한 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농촌진흥청은 회의장에 쌀 관련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연구자문과 비전·정책성 논의 연구기획자문단 회의 가져

우리 연구원은 연구기획에 자문과 연구원의 비전, 정책성에 대한 의견을 나

누기 위한 연구기획자문단 회의를 5월 10일 합지박에서 가졌다.

연구기획자문단은 농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 연구원의 연구기획을 자문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부 이명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이재길 DNA대사,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 농촌진흥청 문헌팔 차장, 농업기반공사 서성배 부사장, 농수산 물유통공사 임호 기획조정실장, 농민신문사 손혜일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정환 원장을 비롯 부원장과 연구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박성재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농가부채문제와 관련한 연구, 농촌관광과 관련한 연구, 농촌 교육, 공동화, 지역개발 등에 관한 연구 제안이 있었으며, 성장동력 발굴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과 클러스터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제안도 있었다.

### KRE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5월 18일 농림부 배종하 국장을 초청, '한·칠레 자유무역협

정(FTA)을 통한 갈등과 해소'란 제목으로 KRE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배국장은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갈등원인을 분석한 것을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뒤 토론했다.

### 쌀협상 관련 간담회 열어

우리 연구원은 올해 최대 현안인 쌀협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인식 공유, 향후 협상에 대한 방향 논의를 위해 언론인과 농업인단체, 쌀 분야 전문가와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기자단 초청 쌀협상 간담회를 4월 30일 가졌고, 이어 전문지기자 초청 간담회를 5월 3일 개최했으며, 5월 7일에는 쌀연구 전문기인 쌀연구회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5월 11일 전업농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5월 12일 전농 관계자를 초청해, 5월 21일 한농연 관계자들을 각각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농경토론회 2차례 개최

우리 연구원은 5월 11일 중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해 오세익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영상물 상영도 있었다.

지난 5월 21일에는 김태곤 부연구위원이 '세계 곡물수급 구조변화(재고감소와 가격상승의 배경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중회의실에서 농경토론회를 개최 발표를 했다.

## 개방화시대 농림기술혁신체계 구축 심포지엄 5월 11일 aT센터에서 열어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FTA와 쌀협상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림기술 혁신 전략방안을 모색코자 5월 11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방화시대 농림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농업관련기업체 등 4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려 초청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 등이 있었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성과물을 전시하는 부대행사도 가졌다.



# 쌀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제안

임 송 수 연구위원

2002년 기준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가 수는 99만 호로 전체 농가 수의 77%에 이른다. 농사짓는 땅의 절반 이상이 논이고,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는 논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다. 경제 재화로써 쌀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1/3이 쌀에서 비롯된다. 농가는 농업 조수입의 1/3 이상을 쌀에 기대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가운데 1/3을 공급한다.

## 쌀의 경제학 그리고 문화

FAO 자료로 계산해보니, 2000~01년에 쌀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28개국이다. 이 가운데 쌀을 100만 톤 이상(조곡 기준) 생산하는 나라는 29개국이고 우리나라가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세계에서 9위였다.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쌀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중요한 형성자이다. 어떤 이는 우리 문화에서 쌀과 연계된 문화를 찾는 것보다 쌀 문화가 아닌 것을 끄는 게 쉬울 거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벼씨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은 쌀의 원조로서 우리를 우월하게 할 만하다. 여름철에 비가 몰려 내리는 문순지대에서 쌀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생태계에 적합한 작물이다.

이처럼 쌀에 관한 얘기를 처음부터 장황하게 늘어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쌀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되짚고 싶어서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좋은 싹든 쌀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사실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쌀 협상은 그 수입확대 폭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에 앞서 산업화 과정을 겪은 선진국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날 농업 생산과 고용구조가 일반 산업과 크게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취약한 농업구조의 문제를 안게 됐다. 젊은 노동력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면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중년층 이상의 전업률은 낮아 그들은 농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의 농업구조는 고령화됐고, 노임이 오르고 기계화가 촉진되면서 겸업 위주의 소농과 규모화를 추구하는 전업농의 구조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쌀 농가를 지원할 이유

한편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농업보조의 형태를 가격에서 소득을 목표로 한 직접지불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앞선 농업구조 아래에서도 선진국들은 자국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보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가격보조의 축소 또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은 불가피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개도국 지위 유지를 통한 농정의 신축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WTO는 가격보조처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보조(AMS)라고 하고, 큰 폭으로 AMS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한다. 쌀 수매제도의 위축도 이때문이다. 반면에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조는 이른바 그린박스로 분류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려면 그린박스인 비연계(decoupled) 소득보조를 활용한

정책 수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진다.

##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앞으로 쌀 가격이 떨어진다면, 다원적 기능의 유지를 목표로 도입한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농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영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은 유럽과 미국의 농가처럼 우리 쌀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안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치이래 농가는 쌀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소득안정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그린박스에 해당하는 고정 직접지불과 AMS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직접지불은 과거의 고정된 기준연도를 근거로 산출하기 때문에 농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알맞은 소득안정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 목표 수준이 너무 높으면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농가의 자구노력은 적을 것이다. 반면에 목표 수준이 너무 낮다면 정책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농가가 감내해야 하는 경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인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투명한 논의와 더불어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면서 아름다운 농촌과 환경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국가는 농가로 하여금 경영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의 노력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주요국과의 1차 쌀 협상 결과

서진교 부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로 지난 5월 18일까지 중국, 태국, 호주 등 소위 핵심 이해당사국들과 쌀 협상을 가졌다.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나머지 국가와도 협상을 추진하여 6월 중순까지는 쌀 협상 참가의사를 표명한 9개국과 한 차례 접촉을 마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1차 접촉을 끝낸 4개국을 중심으로 협상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 협상대책 방향을 모색한다.

## 미국·호주 안정적 시장접근 관심

미국은 협상의 전문 국가답게 먼저 쌀 협상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 협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점은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미국 쌀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관세화가 될 경우 미국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접근이란 최소한 현 수준 이상의 시장접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이 의무수입물량의 관리 측면에서 자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언급함에 따라 최소한 현재와 같은 국영무역방식에 의한 의무수입 쌀의 관리는 이번 쌀 협상 결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러한 용도제한 문제는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호주 역시 미국과 대동소이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의 쌀 수출이 SunRise라는 단일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은 높

지만 1~2kg 단위의 소량판매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호주 역시 안정적 시장접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인도 관세화 선호, 내심 불투명

중국은 상대적으로 관세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WTO의 시장개방 기본 원칙인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고 왜 또 다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문의한데서 이와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점은 태국과의 협상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케언스그룹의 일원인 태국 역시 관세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타결을 원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태국 역시 시장접근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 관세화유예 연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국과 태국의 속마음이 진실로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유예 연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 내기 위한 전략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태국도 기본적으로 관세화유예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문제는 그 조건이라도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과 태국은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6월 중순부터 수치협상 될 듯

이와 같은 주요국과의 1차 협상은 일단 우리의 관세화 유예 연장의 입장을 상대국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관세화유예 연장 방향으로 물고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중국과 태국의 반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이해 당사국들간의 이해관계

가 서로 상이하여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1차 접촉이 우리나라의 관세화유예 연장의 입장 설명과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타진하는 탐색전 성격이었으므로, 향후 협상 일정을 고려할 때(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휴가철로 사실상 협상이 어렵다는 점)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조건 협상(구체적인 수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화 지렛대로 삼아 국별 약점 공격

1차 협상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협상에서는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 폭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태국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화로 전환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국별로 최대한 공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세화가 돼도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나 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전략적으로 흘릴 필요가 있다. 협상추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협상 결과를 좌우하기 마련이다.

한편 최근 DDA 농업협상의 진행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의 최종 판단은 가능한 늦출 필요가 있다. 특별품목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또한 연내 모델리티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수치협상은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의 동등성 분석에 기초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국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문제점

대만은 2002년 WTO 가입과 함께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유예를 하는 대신에 1990~92년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144,720톤의 쌀을 의무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는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현재의 쌀 수입은 무세의 관세할당물량(TRQ) 144,72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TRQ 초과분에 대해서는 kg당 45元(1元은 35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개방이후 2년이 경과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양상을 살펴본다.

##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대만은 이해관계국과 협상없이 2002년 9월 30일 관세화 전환조치를 WTO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호주, 태국 등 3개국이 이의신청 중에 있다. 관세상당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였고, 또 관세화조치도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에는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경우는 적어도 연간 0.8% 이상의 최소시장점근물량(MMA) 증량이 불가피하고, 더구나 현재의 8%도 국내시장에 대단한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쌀 수입량을 보면, 2002년은 MMA 144,720톤, 2003년은 TRQ 144,640톤으로 현재까지 의무수입량은 전량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 TRQ를 초과하는 수입은 고관세의 영향으로 완전 차단되고 있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이 대만 쌀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은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기준년도의 8%는 2003년 소비량(1,150천톤)의 12.6%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이것이 국내시장에 급속히 방출되고, 더구나 일본, 호주, 미국 등의 고급쌀이 사관됨에 따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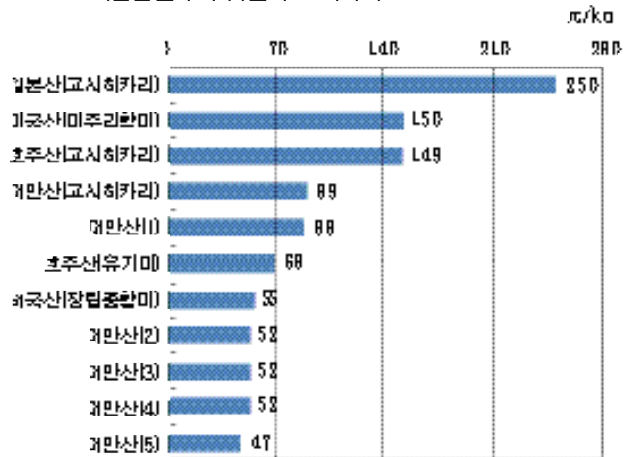
## TRQ 수입쌀이 시장교란

대만은 TRQ 수입량의 65%는 정부수입, 35%는 민간수입으로 배분하고 있다. 2003년도 정부수입은 미국이 7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수입은 태국(61.4%), 이집트(28.2%), 미국(9.2%), 일본(0.6%), 호주(0.5%) 순이다. 품질은 고급쌀(일본, 호주, 미국산)과 저급쌀(태국, 이집트산)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급품의 영향으로 대만산이 중저급쌀로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쌀은 백화점이나 슈퍼에 흔하게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입쌀의 소매가격은 백미 1kg당 일본산 고시히카리가 250元을 최고로 하여, 미국산이 150元,

호주산 149元 등으로 고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산은 중품이 대체로 50元 전후이다.

대만산쌀과 수입쌀의 소매가격 (2004년 4월말)



수입쌀이 시장에 즉시 공급되는 것은 TRQ 관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수입미는 원조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또 일정한 기간내에 방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의 WTO 가입 협상시에 미국의 요구로 수용된 것이다.

## 의무수입쌀의 관리가 과제

이와 같은 수입쌀의 영향으로 대만 쌀농업이나 쌀시장에 생산과잉과 가격하락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생산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량 수매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가격하락에 대응, 2003년 10월부터 기존의 계획수매제와 지도수매제 외에 '여량수매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전량수매'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하락은 반전시키고 있으나, 수급조절을 비롯하여, 고품질쌀 생산, WTO 규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등에 차질을 가져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 2003년도 쌀 식부면적이 27만 2,100ha이나 생산조정면적은 24만 3,700ha로서 논면적의 47%에 달하는 부담도 안고있다.

이와 같이 의무수입물량인 MMA나 TRQ 수입이 예상을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만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화유예 협상에서도 협상상대국은 시장점근기회 확대를 위한 MMA 증량 요구와 동시에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MMA 수입쌀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 추곡수매가 4% 인하 추진... 농가소득 중 쌀 비중 50% 넘어

## 수출물량 증대폭이 협상관건 관측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국내 쌀개방을 위한 주요 이해 당사국과의 양자간 1차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이 표면상 관세화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쌀시장의 관세화 전환 보다는 유예 연장쪽에 무게를 두며 그 대가로 자국산 쌀의 공급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지난 5월 6일 첫 협상을 벌인 미국은 미국산 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시장 접근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 국내에 수출하고 있는 수준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현재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는 자국산 쌀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풀이하였다.

태국은 자국산 쌀의 수출량을 확고하게 더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관세화 유예의 연장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호주도 자국산 쌀을 일정 물량 이상 수출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표면상 관세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자국의 수출물량을 더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언론들은 협상 분위기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관측하면서, 하지만 이들 국가가 자국산 쌀의 수출물량 증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과연 우리측이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가 협상의 관건이라고 분석하였다.

## 추곡가 4% 인하안...농민단체 반발, 진통 예상

지난 5월 4일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더 검토하라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던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수매가 인하 추진은 쌀개방 협상을 하고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정치권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수매가 인하안의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하였다.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은 쌀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수매가 인하안을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쌀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 농가소득 중 쌀 비중 2003년 50% 넘어

농림부가 지난해 농가당 쌀 소득이 545만원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5월 9일 밝힘에 따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1082만5000원) 중 쌀 소득 비중은 50.3%로 전년보다 3.4%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UR 체제 직전인 1994년보다 11.1%p 높은 수준으로,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은 95년 38.1%까지 떨어진 뒤 상승하기 시작해 97년 54.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 5.10>은 국내 쌀 소비가 1995년 쌀시장 개방 이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가운데 올해로 UR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쌀 공급과잉과 재고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하였다.

## 협동조합개혁 농림부-농협 시각차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5월 12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방시대 농정개혁의 핵심은 농협 개혁"이라면서 "농협이 자발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행정권한으로 농협 개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으며, 부실 조합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농협 개혁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이에 앞선 5월 1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조합의 통·폐합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서는 조합의 자생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자본금 확충 등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으며, 신용·경제 분리도 농협과 합의하지 않은 농림부의 장기구상이라고 주장해 협동조합 개혁추진 주체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 도시가구 私교육비 농촌의 5배

5월 10일 통계청이 '2003년 농가경제조사'와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촌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은 1,800만3,000원으로 같은해 도시가구 평균 가계지출액(2,323만8,000원)의 77.5%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농촌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평균 84만원으로 도시가구(264만6000원)의 3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 5.10> 등 언론들은 도시지역 가구의 소비지출비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농촌지역 교육비 비중보다 3.2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농촌가구의 5배에 달해 기쁨이나 심각한 도농간 학력격차가 구조화하거나 심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 직원들 과중한 업무 불구 직업 직무 만족도 상승

## 2004년 직원직무의식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 실시된 2004년 원내직원 직무의식조사에서 연구원 직원들의 직업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관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직업 만족도는 66.0%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해 전년보다 만족도가 32.1%p 상승하였으며, 연구원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57.1%의 직원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22.8%는 '연구원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해 직원 대다수는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에서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연구분야 또는 직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2.9%, '대체로 만족한다' 55.8%, '보통' 30.8%, '불만족' 10.6% 순으로 집계되어 역시 직무 만족도도 지난해보다 10.9%p (47.8% 58.7%) 증가하였다.

하지만 직원 과반수는 업무량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10명중 7명은 일주일 평균 3일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역시 직원 10명중 7명은 여전히 자신의 연봉 수준이 일반적인 경향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 직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경영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원 정체성, 비전 등 논의 부서별로 춘계 워크숍 가져

우리 연구원은 5월 14일과 15일 부서별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구원이 추진 중인 CI 작업관련 연구원의 정체성, 비전, 이념, 원훈 등에 대한 논의와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부서별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취합·정리하여 연구원 MI(Mind Identity)를 설정, CI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정연구센터, 기획조정실 행정실은 속초에서, 농촌발전연구센터는 양양에서, 농업관측센터는 부안에서, 산림정책연구실은 보은에서, 자료정보지원실은 강화도에서 각각 부서별 수련회를 가졌다.

### 버섯기술설명회 개최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와 한국버섯학회는 5월 14일 양계동 하나로 클럽에서 버섯재배농가와 관계자들에게 버섯분야의 연구개발된 기술을 모아 기술설명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버섯 관련 기술 및 일반기술 중 농가와 산업체에 기술 이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16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고, 한국버섯학회에서는 학술발표 및 일반인 대상 버섯 강좌를 개설했다. 또한 강당 로비 및 옥외매장에 전시품, 특이버섯사진 및 야생버섯실물 등 약 100여점을 전시하고 시음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버섯관련기술의 농

가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버섯농업의 확산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학회 심포지엄 및 상품전시회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버섯 및 가공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 연구원 대외활동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5월 21일 경제사회연구회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연구회가 5월 21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실태와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4월 29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남북환경포럼에서 '북한의 농업기반 현황과 농정전망'이란 제목으로, 5월 18일에는 통일문제연구협의회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발전방안 모색 농업분야'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용택 연구위원은 5월 21일 경제사회연구회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농업 투자 방식의 반성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8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식품전망 회의에 참석 및 발표를 위해 5월 16일 출국, 21일 귀국했다.

△박시현 연구위원은 5월 11일 농촌진흥청에서 녹색관광에 대해 강의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5월 11일 농업연수부에서 농업행정실무반을 대상으로 경제학 기초에 대해 강의했다.

## 전반기 신규연구직원 7명 공채



우리 연구원은 2004년 전반기 신규 연구직원 7명을 공채했다.

이번에 합격한 신규직원은 전문연구원에 산림경제분야 이상민 박사, 농업경제분야 신용광 박사, 연구원에 경영분야 교육, 경제 및 농업경제 분야에 임성진, 이현주, 임소영, 전산정보분야 김홍원 씨를 각각 채용

하고 5월 3일 중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